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2023년 11월 7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Ⅰ 공동주최 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이용빈, 김정호, 이동주, 박홍근, 고영인,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 사회: 손지승 민주노총 정책국장

시간	내용	세부내용
14:00~14:20	축사	민주노총 임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4:20~15:20	연구발표 (각 20분)	1. 외투기업 현황 및 쟁점 이한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외투기업 노동조합 사례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 3. 지원제도 분석, 외투기업 문제 개선 방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
15:30~15:35	현장발언(5분)	금속노조 한국오텔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15:35~16:15	종합토론 (40분)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백남주 연구위원 사무금융노조 임동근 사무처장(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박경구 사무관

토론회 순서

〈인사말〉

인사말 1.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9
인사말 2.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11
인사말 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13
인사말 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15
인사말 5.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17
인사말 6.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19
인사말 7.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21

〈발제〉

연구발표 1. 이한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5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쟁점’	
연구발표 2.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	37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사례’	
연구발표 3. 오민규 노동문제 연구소 ‘해방 실장	49
‘지원제도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문제 개선 방안’	

〈종합토론〉

토 론 1.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우원 연구위원	61
토 론 2. 사무금융노조 임동근 사무처장(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	71
토 론 3. 금속노조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83
토 론 4.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박경구 사무관	91

축 하 인 사

[인사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그리고 우원식, 박주민, 이용빈, 김정호, 이동주, 박홍근, 고영인, 이은주, 류호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하신 서비스연맹 연구원의 백남주 연구위원, 사무금융노조의 임동근 사무처장,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의 최윤미 분회장님과 본 토론회가 있을 수 있게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신 민주노동연구원의 김성혁 연구원장, 이한진 연구위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는 전체 매출의 10.8%, 수출은 18.6%, 고용은 5.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증대와 수출확대 그리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는 선전을 하며 앞다투어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고 이들 기업에 대한 우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며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각종 세제 혜택과 토지제공 및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노동 규제 완화, 각종 인프라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특혜를 받았지만 갑작스런 사업 청산으로 인한 먹튀, 기술탈취, 과도한 배당,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량해고와 노조탄압과 같은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외투기업들의 폐해를 살펴보자면 2015년 기술먹튀 논란을 빚었던 경기 이천의 하이드스 공장폐쇄, 2018년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있었고 2020년 대구의 자동차 부품사인 한국게이츠 그리고 같은 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한국산연, 2022년 경기 안산의 한국와이퍼 등이 일방적인 기획청산 및 폐업을 단행하였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국옵테컬하이테크의 경우 2022년 공장화재 사건 이후 갑작스런 청산 결정이 이뤄졌으며 지금도 13명의 노동자들이 일본 닛토자본 상대로 먹튀사태에 대해 책임질것을 요구하고 공장안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폐업 이후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하고 인력도 충원 하였지만 구미 공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없이 그들을 해고 하였습니다.

국내기업과 다르게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제재 수단이 거의 없다 보니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금융업 등 다른 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들에서도 이러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났만 개별사업장의 투쟁문제로 대응이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 분석한 내용 전무하다보니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장에서의 투쟁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 매뉴얼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사업을 민주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마침내 연구의 결과물이 책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외국인투자기업 정책연구를 위해 노력하신 연구진과 지원업무를 수행해주신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외국인투자기업 정책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는 본 토론회가 외국인투자기업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정책연구발표를 맡아주신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과 토론에 나서주신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님,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님,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연대했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른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준 대표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원정을 포함한 1년이 넘는 투쟁과 50여일에 가까웠던 단식농성, 일본대사관 방문과 국정감사 및 국 토론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려 했던 일본텐소자본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외투기업제도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방향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외투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먹튀와 불법을 자행하는 외투기업의 횡포에 맞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외투기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투기업의 위법한 경영활동을 규제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외투기업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외투기업의 특성상 역내를 벗어나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할 때 처벌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사회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대응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먹튀의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차례 목격한 외투기업의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례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진일보한 의견이 토론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사회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외투기업의 횡포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박홍근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이용빈, 김정호, 이동주, 고영인 의원님과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8년,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과 규제완화,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는 투자기업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매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외투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해온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외투기업의 진출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선진기술의 획득 등은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혜택만 누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응당 준수해야 할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외면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술유출 문제와 함께 기업의 급작스러운 폐업과 무분별한 구조조정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분석 등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시의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정호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도착기준으로 2022년 181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올해 3분기는 역대 최대인 1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자 실적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입지 지원 등 설립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투기업은 누리고 있는 혜택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라는 이면 뒤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탈취, 외투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등 피해가 극심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들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자 유치를 성공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산업에 외투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초기 투자 이후, 자본 유출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부터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이동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업의 주요 동향과 쟁점을 살피고, 올바른 산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억 4천만 달러였던 신고 금액은 금융 시장 개방에 힘입어 2010년대에는 1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금액 누적액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1.3% 증가하여 239억 5000만 달러에 달했고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금액은 20.2% 증가해 13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주지만 동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경영정보 공개를 의도적으로 꺼리며 이윤 유출의 빌미를 만들거나, 일방적으로 폐업과 철수를 강행하며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노동행위, 산업법 위반 등 한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정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투자에 대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자국 내 중소기업 보호, 안정적인 고용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개선, 기업 내 노사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해 주신 전문가와 참석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이용빈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꺼이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진 폐해 또한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토지제공 등의 인센티브와 노동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도 외투기업들은 무분별한 사업 매각과 일방적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8개월간 고생해 주신 민주노총의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

술탈취와 투자회피, 자본유출과 먹튀 논란, 구조조정과 고용축소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나눠주실 전문가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의 피해를 막을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적·입법적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류호정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 농성이 오늘로 282일째입니다. 사측은 희망퇴직 이후 남은 13명에 대해 모두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4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에 농성장 물을 끊기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공장 진입을 시도에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11월 공장 화재 이후 일본 닛토덴코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법인 청산과 공장철거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에 고용을 승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이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습니다. 외투기업 ‘먹튀’의 전형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8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이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는 410억 원뿐입니다.

외투기업 먹튀가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그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ESG 경영, 윤리경영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듣기 싫은 거추장스러운 말에 불과합니다. 구조조정, 일방적인 사업부 철수, 노조 탄압, 기술 탈취,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외투기업 먹튀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제가 대표 발의한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재 공동 발의를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된 부당이득에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준비를 위해 많은 분이 애써 주셨습니다. 공동주최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구발표를 해주신 이한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상 실장님 고맙습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님, 최윤미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 분회장님이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토론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한국와이퍼 청산 사태가 ‘사회적 고용기금’ 마련이라는 방식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단락됐습니다. 외투기업 먹튀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관련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ILO 조항 탈퇴”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절입니다. 반노동과 노동 혐오가 판을 칠수록 국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 외투기업 먹튀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쟁점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쟁점

➤ 문제제기 및 분석 방법

■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1971년 외국인투자 신고건수 126건, 신고금액 4천만 달러 → 2022년 신고건수 3,462건, 신고금액 304.5억 달러

■ 2023년 3월 9일 에스오일 사헌 프로젝트 기공식 윤대통령 발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문제 제기

‘외자유치만이 살길?’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 기술 획득 등 외자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충분한가?

법인세가 높아 외자유치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는 타당한 것인가?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시스템 있는가?

외국자본의 진입부터 철수까지 모니터링과 분석, 피드백 과정은 있었는가?

분석결과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있었는가?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지역(국가)·산업별 통계자료 및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등을 분석

➤ 분석 결과 요약

-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2.7배나 더 많았다. (IFDI > OFDI)
투자수지 불균형 심화,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자본의 재투자 유도 방안
-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축소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국가 전체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10.6%, 고용은 5.6% (고용 창출?)
- 법인세나 경제 규모가 외자 유치의 절대 조건은 아니었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법인세가 높지만 FDI 유입 더 많은 나라 다수, GDP 대비 FDI 비중도 낮아
- 제조업 투자 비중 줄고, 국가별로 '투자약속 준수율'이나 투자 규모, 자본철수 현황 모두 달랐다.
모니터링과 분석, 피드백을 통한 개선 노력은?
-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우회투자 및 사모펀드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다.
사실 관계 확인은 물론 기본적 통계조차 없는 현실

→ 전략과 관리의 부재, 수치적 결과에 집착한 외자유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부족

➤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외국인직접투자 1990년대 들어 유의미한 흐름

1991~1995년 총투자액 66억 달러 (연평균 증가율 26.1%)

1996~2000년 총투자액 498억 달러 (연평균 증가율 56.2%)

■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추이(71~2022년) (단위: 천 달러)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inflows) 2015년을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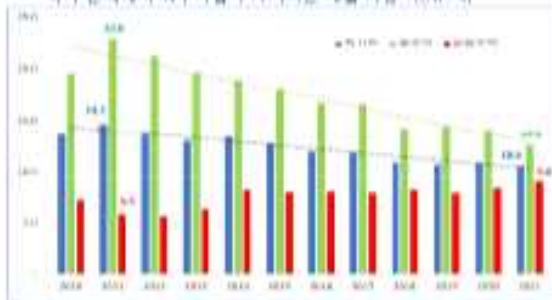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강화: G2(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경험: 자국 우선주의 및 규제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부채축소 압력 가중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FDI, inflows)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UNCTAD 통계)



외투기업의 위상 : 매출 및 고용

■ 국가 전체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단위: %)



2021년 기준 외투기업의 매출 비중은 10.6%, 고용비율은 5.6%로 고용창출 효과 부족

국가 총 고용 대비 외투기업 고용 비중 하락

전산업 : 2010년(6.3%) → 2022년(5.6%) ▼12.7%
제조업 : 2011년(10.4%) → 2022년(8.6%) ▼17.3%
비제조업 : 2012년(3.6%) → 2022년(4.4%) ▲22.2%
금융보험 : 2010년(12.4%) → 2022년(6.6%) ▼46.8%

국가 총 매출 대비 외투기업 매출 비중 하락

전산업 : 2011년(14.7%) → 2021년(10.6%) ▼27.9%
제조업 : 2011년(23.0%) → 2021년(12.6%) ▼45.2%
비제조업 : 2012년(5.8%) → 2021년(9.0%) ▲55.2%

■ 국가 전체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 (단위: %)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1971~2022년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 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누계금액	누계건수	금액 비중	건당 신고금액
전 계	4,52,979	82,543	100.0	5.2
아주지역	139,020	17,257	30.7	8.0
아주지역	142,565	48,379	31.7	2.9
구주지역	142,147	12,776	31.6	11.1

지역별 투자 비중은 유사

아주(32.3%), 아주(32.9%), 구주(32.8%)

건당 투자액은 큰 차이

전계 평균 5.2백만 달러, 아주(8.0백만 달러)

아주(2.9백만 달러), 구주(11.1백만 달러)

건당 투자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자력 창출 효과는 커지며, 철수 가능성은 줄어든다.

연평균투자액 급증 추세

149 → 617 → 5,647 → 10,926 → 19,963 → 29,984(백만 달러)

아주지역 투자 비중은 줄고

아주지역, 특히 구주지역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
아주지역(35.8%) / 아주지역(28.9%) / 구주지역(35.7%)
(2020년대 기준)

■ 지역·연대별 외국인직접투자 / 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71-80년	81-90년	91-00년	01-10년	11-20년	21-22년
전 계	370	1,880	20,464	32,562	62,904	21,4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주 지역	947	3,092	16,044	34,030	72,311	16,142
	25.6	16.5	78.4	104.7	115.0	75.2
구주 지역	117	1,029	13,930	41,195	38,889	21,417
	31.6	54.1	67.4	126.5	61.8	100.0
연계	1,467	6,165	56,471	109,258	199,632	59,9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투자약속 준수율

■ 외국인직접투자 총

1. 신고기준: 신고서에 제출된 신고금액
"투자 의향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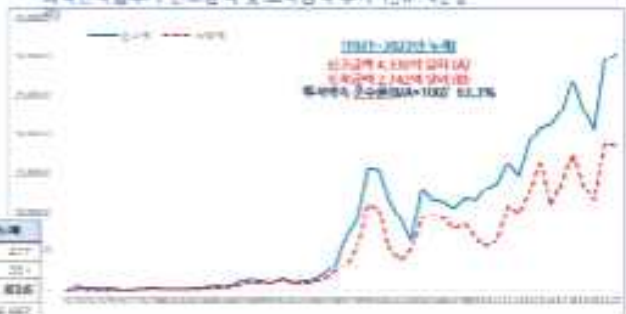
2. 도착기준: 신고서 제출 이후 실제
"투자가 실현된(돈이 들어온) 금액"

투자약속 준수율(%) = 도착금액 / 신고금액 × 100

■ 지역·연대별 투자약속 준수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71-80년	81-90년	91-00년	01-10년	11-20년	21-22년	비율
전 계	24	17	120	33	32	277	2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주 지역	296	1,429	11,088	14,543	28,189	11,245	6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주 지역	301	1,389	31,484	47,192	41,494	17,899	7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계	797	2,818	42,572	61,735	69,683	29,144	7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 계	117	1,029	13,930	34,030	72,311	16,142	6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투자약속 준수율 하락 추세

79.8% → 73.8% → 66.0% → 64.5% → 61.8% → 62.1%

71~22년 누계 기준 투자약속 준수율

구주지역이 68.9%로 가장 높고, 아주지역은 62.4%였으며

아주지역은 47.7%로 가장 낮음

→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최초 신고액보다

투자를 줄였거나, 취소(또는 철회) 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

➤ 외국인직접투자 상위11개국

총 외국인투자에서 상위 11개국 비중
신고기준 80.4%, 도착기준 79.9%
→ 외자유치 소수 국가에 집중

신고 비중 대비 도착 비중 격차 큰 나라
미국(23.8% → 15.6%)
중국(4.6% → 2.6%)
홍콩(4.5% → 3.4%)
→ 투자약속 준수율이 낮은 국가

높은 조세피난처 투자 비중
네덜란드, 싱가포르, 몰타, 홍콩, 케이먼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 비중 높음.
→ 특히 실 투자(도착기준)에서 더 높음

■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1개국 현황 / 1971~2022 누계기준 (단위: 억. 원, 달러, %)

순위	신고기준				도착기준			
	국가명	건수	실고금액	비중	국가명	업체수	도착금액	비중
1	미국	13,566	102,877	23.8	미국	6,541	42,699	13.8
2	일본	15,004	48,933	11.3	일본	7,329	36,470	13.3
3	네덜란드	1,903	27,932	8.8	네덜란드	853	23,682	12.3
4	싱가포르	3,459	29,862	6.9	싱가포르	1,666	22,949	8.4
5	홍콩	364	21,828	5.1	홍콩	101	18,203	6.6
6	영국	2,093	20,738	4.8	영국	878	17,171	6.3
7	중국	13,628	20,054	4.6	독일	1,046	13,735	5.0
8	홍콩	3,332	19,361	4.5	캐나다	490	10,170	3.7
9	독일	2,309	18,023	4.2	중국	1,889	9,250	3.4
10	케이먼	984	14,096	3.3	프랑스	503	7,581	2.8
11	캐나다	1,224	12,394	2.9	중국	7,379	7,078	2.6
소 계		58,066	348,203	80.4	소 계	29,684	218,987	79.9
전체 합계		82,343	432,975	100.0	총투자액	41,342	274,184	100.0

➤ 국가별 투자약속 준수율과 건당 투자액

■ 국가별 투자약속 준수율 / 누계기준 (단위: %)

국 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몰타
비 중	41.5	74.5	88.8	76.5	76.3
국 가	영국	중국	홍콩	독일	케이먼제도
비 중	62.8	35.3	47.8	76.2	72.1

국가별 투자약속 준수율

중국(35.3%), 미국(41.5%), 홍콩(47.8%) 등은 낮고
네덜란드(88.8%), 영국(82.8%)은 높음.

■ 국가별 업체당 평균 투자액 / 도착기준 (단위: 천 달러)

구분	전체평균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몰타
금액	6,632	6,734	4,976	29,486	13,775	18,225
구분	영국	독일	케이먼	중국	프랑스	중국
금액	19,557	13,131	20,381	4,897	15,071	887

국가별 업체당 평균 투자액

전체 평균(6.6백만 달러)

중국(0.9백만 달러), 홍콩(4.9백만 달러),

일본(5.0백만 달러) 등은 낮고

몰타(180.2백만 달러), 네덜란드(39.5백만)

케이먼(20.4백만 달러) 등은 높음.

→ 투자규모가 큰 건은 대개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투자되고 있음.

■ 2021년 원준금액 상위 10국 평균투자액 및 고용 (단위: 억. 원, 달러, 명)

구 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몰타	독일	홍콩	중국	프랑스	전체
원준 투자액	8.1	9.0	18.3	34.7	39.2	238.6	18.0	8.4	2.7	24.3	18.3
고용 명	78.3	58.9	82.8	137.2	81.4	927.8	56.3	31.1	4.5	77.5	53.0

2021년 원준 기준

전체평균 투자액(10.5백만 달러), 고용(53.0명)

중국(2.7백만 달러 / 4.5명)

홍콩(4.9백만 달러 / 31.1명)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신고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	기타	합계
20년대 (71~80)	제조업 비율 총가액	39.7 66.5	4.2 28.0	(1.1) (26.0)	8 100.0
80년대 (81~90)	제조업 비율 총가액	34.8 36.8	25.3 41.0	(1.3) (21.6)	16 100.0
90년대 (91~00)	제조업 비율 총가액	2,880 30.6	2,390 41.9	(88) (14.6)	187 100.0
2000년대 (01~10)	제조업 비율 총가액	325.3 3.4	1,102.4 11.5	1,105.1 11.5	816.0 100.0
2010년대 (11~20)	제조업 비율 총가액	27.2 32.5	159.3 64.2	(38.5) (18.4)	53.5 100.0
2020년대 (21~22)	제조업 비율 총가액	20.077 24.0	15.546 50.0	(1.16) (3.7)	29.983 100.0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90년대까지는 제조업 비중이 높았지만,
70년대(66.6%), 80년대(58.4%), 90년대(50.6%)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짐
00년대(61.5%), 10년대(64.2%), 20년대(67.8%)

■ 산업별 건당 투자액 / 71~2022 누계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건당투자액	건당투자액	건당투자액	건당투자액
제조업	52.544	432.979	100.00	5.2
서비스업	20.729	151.765	35.05	7.3
금융보험	59.776	264.351	61.05	4.4
기타	14.844	(87.022)	(32.92)	21.5
전체	1.585	16.178	3.74	10.2
농림수산업	463	685	0.16	1.5

산업별 건당 투자액

각 산업 평균 건당 투자액은 5.2백만 달러
제조업은 7.3백만 달러 / 서비스업 4.4백만 달러
(서비스업 내 금융보험업 비중 32.92%)

▶ 2021년말 현존 외투기업

■ 2021년 현존 외국인투자기업 (단위: 백만달러, 개, %)

구분	원본금액	기업 수	기업 당 평균금액
전체	원본금액	기업 수	기업 당 평균금액
제조업	159,689	100.0	1,596.89
서비스업	51,388	39.0	1,317.64
금융보험	11,941	41.3	289.15
기타	36,192	22.7	1,594.36
지역별			
수도권	116,194	77.7	1,495.42
· 서울	82,436	51.6	1,597.62
· 경기	22,891	14.3	1,600.77
· 인천	10,789	6.7	1,610.30
비수도권	43,495	22.3	1,949.98

누계기준 건당 투자액
(1971~2022년)

제조업 5.2백만 달러
서비스업 4.4백만 달러
금융보험 6.1백만 달러

누계기준과 원본금액 기준 건당 투자액을 비교
→ 투자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비중이 많았음을 추정 가능
수도권 특히 서울에 외국인투자 집중되어 있음

■ 2021년 현존 산업별 평균 투자액 및 고용 (단위: 백만달러, 개, %)

구분	원본금액	기업 수	기업 당 평균금액	기업 당 평균고용
제조업	159,689	100.0	1,596.89	10.5
서비스업	51,388	39.0	1,317.64	9.1
금융보험	11,941	41.3	289.15	10.1
기타	36,192	22.7	1,594.36	14.3
지역별				
수도권	116,194	77.7	1,495.42	9.5
· 서울	82,436	51.6	1,597.62	9.1
· 경기	22,891	14.3	1,600.77	9.4
· 인천	10,789	6.7	1,610.30	8.8
비수도권	43,495	22.3	1,949.98	14.2

제조업 평균 투자금액(16.6백만 달러) 및
고용(88.8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투자액 대비 고용창출 효과 매우 낮음

➤ 투자수지의 심각한 불균형

외국인직접투자 (Inward FDI) <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 신고기준 (단위 : 백만원)



연대별 투자수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80~90년	91~00년	01~2007년	11~2020년	21~2022년
수지	-1,501	70,115	34,555	-315,339	-150,009
연평균	-133	1,012	8,497	-31,509	-75,004

■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 도착기준 (단위 : 백만원)



투자액의 증수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투자액의 증수율
외국인직접투자	41.43%	21.13%	63.3%
해외직접투자	11.40%	15.34%	75.0%

➤ 법인세 논쟁

1. 2019년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

- 2017년말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 경쟁력 및 보수언론: "외국인투자 크게 감소할 것"

→ 2019년 명함 받았지만, 이후에는 세계적 흐름
보다 우리나라가 더 양호했음.

■ 최근 5년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액	26,902	23,178	20,747	29,511	30,454
증가율	-	-13.3	-11.1	42.3	3.2
도착액	17,514	13,449	11,488	18,690	18,537
증가율	-	-23.2	-14.6	62.7	-0.8
유입액	1,375,437	1,707,830	961,983	1,478,137	1,294,738
증가율	-	24.2	-43.7	53.7	-12.4

2. 법인세가 높아 외자유치 어렵다?

- 법인세율 24% OECD 국가 중 공동 13위
- 법인세가 우리보다 높지만,
외국인투자 유입 더 많은 나라 다수
- GDP 대비 FDI 비중도 취약

→ 경제규모보다 법인세가 외자유치의
절대조건은 아니다.

■ 주요 국가별 법인세율 및 FDI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호주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FDI inflow	62	35	35	35	20	20	18
FDI outflow	117	48	-	39	-	-	66
법인세율	30.0	25.8%	30.0	25.0	24.0	27.0	24.0
GDVSP	3.7	1.3	2.5	2.9	1.0	6.9	1.1
GDP	1675	2782	1414	1397	2010	301	1665

(주 : FDI 및 GDP 2022년 기준, 법인세율은 2023.07 기준)

자본철수 현황

2018년 2월 한국GM 일방적 공장 폐쇄
2020년 6월 한국계이르 사업철수 일방 통보
2022년 7월 한국악어퍼 일방적 청산 발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일방적 청산 결정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쟁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슈화

노동조합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77.4%)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

- ✓ 연평균 최대 463개 업체 철수
(종업원적여 대한 중폭 투자 감소)
- ✓ 철수 업체 수 비중 > 철수금액 비중
(투자규모 적은 기업의 철수가 많았기 때문)
- ✓ 중국(69.2%) 및 미국(64.7%) 철수 비중 ↑

■ 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 철수 현황(71~21년) (단위: 백만 달러, 개: 개)

구분	2021년 10월 (71~2021년)		2021년 말 평균		2021~2021년		2021~2021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전체	38,881	215,337	15,257	154,889	23,626	98,138	176	176
제조업	8,221	88,379	3,464	37,339	5,042	49,342	112	112
서비스업	26,524	93,649	11,296	65,341	18,526	61,5	27,708	236
비제조업	1,328	44,209	999	46,799	630	62,7	27,657	133

■ 국가별 외국인투자기업 철수 현황(71~21년) (단위: 백만 달러, 개: 개)

국가	2021년 10월 (71~2021년)		2021년 말 평균		2021~2021년		2021~2021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본	2,718	27,829	7,188	21,347	4,470	62,2	12,421	383
미국	2,100	78,887	5,892	39,387	3,791	64,7	20,725	52,3
중국	3,849	15,338	1,418	20,542	5,701	40,2	5,837	24,4
대한민국	411	11,276	884	28,215	369	48,8	10,045	21,2
중국	427	14,132	312	16,038	232	47,2	2,444	14,7
일본	49	1,094	82	19,811	20	42,4	4,281	22,6
독일	511	8,200	1,000	13,517	489	48,5	5,307	28,3
중국	885	7,411	1,764	8,917	879	48,8	1,506	16,9
중국	2,344	4,366	7,617	4,867	5,273	68,2	501	7,3
미국	146	8,788	478	7,487	332	47,5	1,177	18,4
미국	17,227	181,831	38,852	277,047	21,625	68,8	18,078	19,4

조세피난처

‘OECD’글로벌 디지털세 필러1’ 도입 2025년으로 또 다시 1년 유예

‘글로벌 디지털세 필러1’은 OECD 주도로 실제 매출을 올린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

→ 유예에 반대했던 국가들 단독 부과 검토 중

- 참고: 조세피난처의 종류
Low Tax Havens (저세율국)
Tax Shelters (국외소득 면세국)
Tax Resorts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
Tax Paradise (완전 면세국)

- ✓ FDI 상위 10개국 중 조세피난처 비중
70년대(8.4%)
90년대(23.1%)
2020년대(43.8%)
- ✓ 2020년대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조세피난처

■ 연대별 FDI 상위 10개국 중 조세피난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개)

구분	2070년대 (71~80)	2080년대 (81~90)	2090년대 (91~00)	2000년대 (01~10)	2010년대 (11~20)	2020년대 (21~22)
총계	126	274	304	304	304	304
조세피난처	126	274	304	304	304	304
비조세피난처	0	0	0	0	0	0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연세	1,487	6,185	56,477	109,238	199,632	29,307

➤ 사모펀드(PEF)

-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별 투자액 및 비중(2010~2022년) (단위: 억달러, %)

구 분	선고기준		도착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그린필드형	1,915.8	70.3	976.6	59.7
M&A형	811.1	29.7	658.6	40.3
합 계	2,726.7	100.0	1,634.9	100.0

도착기준(실 투자) 2010~2022 누계
 '그린필드형' 비중 59.7%(976.6억 달러)
 'M&A형' 비중 40.3%(658.6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중 사모펀드 비중 확대 시사

- 초과수익 획득 & 채 매각(Exit)을 전제
- 익명성과 비공개성, 불투명성에 기반한 약탈적 행위
 → 인수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글로벌 M&A 시장 규모
 2021년 5.9조 달러로 최고치 기록
 사모펀드 바이아웃 거래 비중 19%

- 글로벌 M&A 거래 규모 및 사모펀드 바이아웃 비중 (단위: 조달러, %)



➤ 시사점

- 국내 자본의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구축 및 국내 재투자 유도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외투기업 관련 정보 수집·분석·평가 시스템
 - 외투기업의 진입부터 철수까지 모니터링과 분석, 피드백 제도화
- 외자 유치 심사 기능과 권한 강화
 - 고용 창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차원의 전략적 외자 유치
 - 기간산업 및 금융 등 공공서비스업에 심사 강화, 사모펀드 진입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폐업 및 청산)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구축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분석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

외투기업 노동조합 사례분석

1. 금속산업
2. 사무금융
3. 서비스산업
4. 산업별 공통성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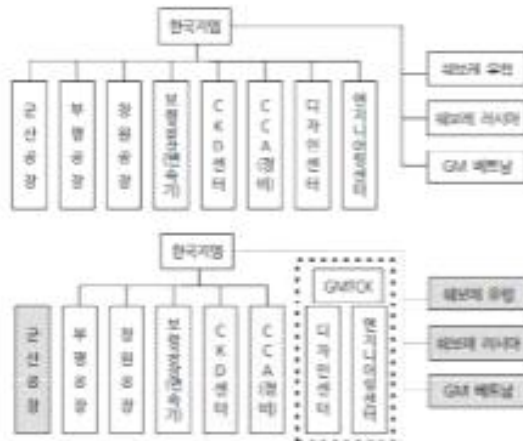
➤ 금속산업 개요

70개 외투기업,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나 유한책임회사 2개, 유한회사 9개.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거친 경우 5개 .
문제점들이 발생한 사례를 다양한 서면자료, 인터뷰 등으로 조사함.

<외투사업장 지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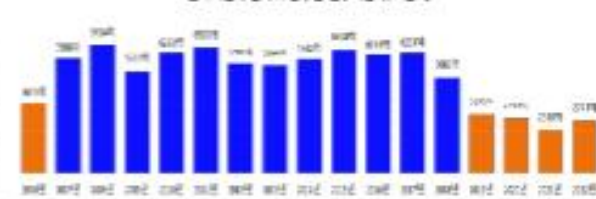
지부	경기	경남	경주	광전	구미	대구	충북	부양
사업장	13	9	3	3	4	4	6	8
지부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충남	포항	지연	합계
사업장	6	3	3	1	5	1	1	70

➤ 한국지엠



- 종합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청기지, 연구용역법인으로 전략
- 공장폐쇄 당하면서도 1조원 현금 지원
- 불공정한 CSA 계약으로 과도한 연구개발비 유출

한국지엠에 본사에 납부한 연구개발비(주요년도)



➤ 르노코리아

- 2013년 2월 700억 과징금 부과 : 과도한 기술이전료 및 이전가격조작.
- 2022년 지리자동차 2,640억원에 르노코리아 지분 30% 인수, 불보 소형차 플랫폼 기술 제공 발표, 기술은 한국 신차개발에 쓰이지 않고 본사 전략에 사용.
- 2023. 9월 계약직 청년노동자 340명에 일방적 해고통보. 2021년 이후 정규직 신규 입사자 없고 3개월, 6개월 기간 20/30대 비정규직 채용, 2022년 영업이익 1,848억원, 부산시의 세금혜택, 시청 로비에 자동차 홍보 등 득혜

<르노/닛산에 지불한 기술사용료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158	176	296	366	406	416	550	1,142	929	246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522	547	499	1,173	1,088	929	900	1,109	750	710

➤ 한국와이퍼

- 2016년부터 자본잠식
- 매출의 80%가 덴소계열사에서 발생, 내부거래
- 2020, 21년 두번의 고용안정 합의했으나 22년 청산 발표
- 2023년까지 1년 투쟁
- 일본 원장 4회, 국회앞 무기한 단식농성, 대체생산 열소 창원공장앞 농성, 완성품 납품되는 현대차 투쟁
- 23.8 노사합의 : 사회적 고용기금, 위로금 정리

<재무제표 추이(억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641	818	850	954	868
매출원가율	98%	94%	101%	92%	100%
당기순손실	-19	-16	-71	-8	-60
자본 총계	94	78	6	-1	-60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705	717	637	370	276
매출원가율	98%	96%	97%	111%	129%
당기순손실	-49	-7	-23	-71	-117
자본 총계	-109	-116	-139	-210	-327

➤ 사무금융노조 개요

- 전체 사업장의 약 10%(25개)가 외국계 기업, 조합원의 약 10%
- 조세피난처 우회 투자 4건, 사모펀드 1개, 유한회사 4개

[표] 사무금융노조 외국계 기업 업종별 현황

외국인투자기업 (총 21개사)		범외국계기업 (총 4개사)	
금융부문	비금융부문	금융부문	비금융부문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1개사 할부금융 2개사 여수신 2개사 신용평가 1개사	정보통신 4개사 전기전자 1개사 무역업 1개사 물류경사 1개사 석유화학 1개사 화물운송 1개사	손해보험 1개사 여수신 1개사 은행 1개사 신용평가 1개사	-
12개사	9개사	4개사	

➤ 사무금융노조 설문조사

- **대표이사 국적(18개사 조사)**
외국인(44%, 8곳), 한국인(56%, 10곳)
CFO가 외국인인 경우 2곳
- **외국자본 투자 이유(18개사 조사)**
한국시장을 겨냥한 영업 및 판매(67%, 12곳)
한국에서의 사업성 유망(50%, 9곳)
기업 매각차익 획득(2곳, 사모펀드 관련)
- **최근 5년간 노사간 핵심 현안(18개사 조사)**
임금제도 변경(50%, 9곳)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39%, 7곳),
인사고과(6곳)
명예퇴직/정리해고(6곳)
경영투자전략(5곳)

➤ 사무금융노조 설문조사



➤ 사무금융노조 설문조사

- **단체교섭과 쟁의 시 최종 결정권(18곳 조사)**
 - 외국본사(4곳) 혹은 사전협의(9곳) 72%
 - 현지 경영진이 결정권을 가진 사업장은 28%(5곳)에 불과
- **현지 경영의 자율성 수준 (18곳 조사)**
 - 낮거나(8곳), 매우 낮다(5곳) 합산 72%
- **경영진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18곳 조사)**
 - 실체 인정하나 경영참여는 최소화 82%(14곳)
 - 악화시키거나 해체하려 함 18%(3곳)
 - 무응답(2023년 노조 설립) 1
- **ILO협약이나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18곳 조사)**
 - 잘 모른다 7, 전혀 모른다 5, 어느정도 안다 5, 잘 안다 1

➤ 애플온저축은행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2016~2022)>



➤ 애큐온저축은행

<당기순이익 및 직원 수 추이(2012~2022)>



➤ 서비스연맹 개요

- 21개의 외투기업, 7개의 외투기업 자회사/하청업체
- 업종 분류
유통 17개, 물류 6개, 연구개발/정보통신 2개, 보안업체 2개, 담배제조 1개, 관광 1개
- 21개 외투기업 중 조세피난처 등 우회투자 13개
- 13개 외투기업 중 외국인 11개,
- 법인형태 : 유한회사 9개, 유한책임회사 1개, 주식회사 11개

➤ 이케아코리아

-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시간 근로(4시간, 6시간 등)
-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함

<고용형태>

기업	소속 근로자 수			업종	지역
	합계 (단시간)	기간없음 (단시간)	기간제 (단시간)		
이케아 코리아	1,677 (860)	1,588 (813)	89 (47)	도소매	부산 기장군
이케아코리아 리테일서비스	358 (210)	337 (195)	21 (15)	도소매	경기 광명시

자료 : 고용형태 공시정보

➤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손익계산서>

구분	~2019.10	~2020.10	~2021.10	~2022.10
매출액	10,729	11,934	11,961	7,214
매출원가	11,920	11,008	11,736	7,303
매출총이익	-1,190	925	225	-89
판매관리비	1,699	1,388	1,929	924
영업손실	-2,890	-463	-1,703	-1,013

자료 : 감사보고서

- 삼성전자 프리트사업부를 미국 HP(잉크젯 중심)가 인수 후 삼성 레이저(한국 독과점)로 프린트 시장 포트폴리오 완성
- 한국법인의 특허권, 지재권 가치 낮게 측정하고, 이전가격 조작으로 만년적자, 자본잠식
- 기술 제품군 완성 후 희망퇴직, 외주 확대

<인력변동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임직원	1,700	1,500	1,382	1,028
소속외	no	142	168	244
조합원	1,200	1,000	500	372

자료 : 고용형태공사

➤ 한국암웨이

<손익계산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396	1,136	1,413	1,211	1,531	1,808
영업이익	1,037	1,001	782	649	994	960
당기순이익	788	769	511	481	851	713

<대차대조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총계	3,227	3,175	3,309	3,239	3,660	3,666
자본총계	1,114	1,096	838	808	1,040	1,177
자본금	218	218	218	218	218	218
이익준비금	109	109	109	109	109	109
비적분이익	788	769	511	481	713	851
잉여금						

자료 : 감사보고서

➤ 쿠팡

- 한국 영업을 중심사업인데,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델라웨어는 법인세가 거의 없고, 무형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규제 측면에서 친기업 성격 분명히 함)
-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근로조건, 납품관계 모범기업이라고 홍보, 한국에서 노동 착취, 과로사(13명), 공급업체 불공정거래 등으로 주가폭락, 주주들 사기혐의 소송.
- 가장 많은 비정규직 양산, 플랫폼노동 배송 최초 사용, 새벽배송.
- 공정거래위 특혜, 자산 5조원 이상, 71개 대기업에 속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되었으나, 김범수 의장 외국인이기 때문 총수 지정(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금지) 배제

<인력변동 추이>

사업체명	합계 (단시간)	기간임용 (단시간)	기간제 (단시간)	소속외	업종
쿠팡주식회사	24,091 (419)	10,486 (11)	13,605 (408)	7,316	드소매
쿠팡물류서비스(주) 유한회사	37,779 (1,164)	9,004 (67)	28,775 (1,077)	3,428	운수 창고업

➤ 유형별 공통성

- **과도한 이윤 유출** : 고배당, 기술사용료,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이전가격 조작
- **구조조정 인력 감축** : 자본철수, 정리해고, 자산매각, 인력감축
- **불안정노동 확대** : 특고, 플랫폼노동, 도급, 하청 등
- **한국법 무시** : 조세회피, 부당노동행위, 생활물류서비스법(쿠팡) 위반, 영업시간 제한 무시(코스트코),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 위반(코스트코)
- **부당한 독해** : 자금지원(한국지엠, 산업은행), 부동산 투기성 매각(덴소코리아, 로노코리아, 쌍용차)
- **외국 본사 주요 결정, 노사관계 좌우** : 현지 관행 이해 부족, 경영정보 제공 기피, 사용자 대표 결정권 결여

➤ 산업별 차이점

- **금속산업** - 이원화되어 있어 자본철수, 폐업이 많음
외투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한 싸움이 효과적이며(원정투쟁), 공급망 공력이 필요
- **사무금융** - 증권, 보험 등은 고객 책임문제가 있어 인수기업의 고용승계가 쟁점
설문응답 노조의 67%(12개)가 최근 5년 이내 인적구조조정(희망퇴직, 외주화 등) 발생
- **서비스산업** - 신산업에서 기존 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권 제한
생산, 판매, 배송, 고객관리 등 공급사슬이 길어 다양한 외주·하청·자회사 등을 만들어 원정의 사용자성 회피하고 불안정노동 확대,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산재 유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

외투기업 지원제도 분석 및 외투기업 문제 해결 방안

➤ 외투기업 지원제도 연혁

법 명칭	시기	주요 내용
외자도입촉진법	1960~ 1966년	- 외국인 투자를 허가제로 운영 - 외국인은 '한국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국민'
외자도입법	1966~ 1997년	- 외국인 투자를 인가제와 신고·수리제로 운영 - 외국인투자 업종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
외투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1997~ 1998년	- 외국인 투자를 신고·수리제로 운영 -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수락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년~	- 외국인 투자를 단순신고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운영 - 기존 외환통제 중심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

▲ 외투기업 지원제도는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계기점을 만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 유럽연합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변경된 내용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5년, 7년)	'19.1.1일부터 신규 감면 폐지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유지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까지 면세 가능(조례 제정 사항)	유지

▲ 외투기업만을 편셋처럼 찍어서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하는 제도 역시 투자협정 내지 국제법 상 분쟁 유발 가능. 중앙정부 아닌 지방정부 경유하는 지원 내지 현금지원 확대로 정책 변경.

▲ 이후 외투기업 지원제도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로도 확장되며, 외투기업 유치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 관외의 기업이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어떤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기업지원제도로 전환되기 시작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항목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세부 내용
① 조세 감면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현재는 감면 제도 폐지)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 2011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음. ③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관련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④ 외국인 세제지원 (외투기업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
② 현금 지원	현금지원 예산의 경우 2018년에는 60억 수준에 불과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 후 정부는 2019년에 500억으로 이 예산을 대폭 늘린 바 있음.
③ 입지 지원	별표 참조
④ 행정 지원	특정 행정사무 처리만으로 연관된 다른 사무행정도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혜택

▲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점점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중심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 펀드 혹은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기업 투자유치제도로 수렴되어 가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중 주요 입지제도 현황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 황
외국인 투자 지역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중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2-1, 광양세풍, 대전국제, 음성성본, 송산2-2, 아산당정	30
	개별형	제조업(67개사), 물류업(2개사), 관광업(7개사), R&D(1개사)	77
	서비스형	서울(3)	3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지구		현곡, 포승, 추팔, 여연한산	4
자유무역 지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울진, 마산	7
	항만·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9

➤ 외국인투자자 보호 제도

항목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자 보호 세부 내용
①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청기는 과실, 주식 등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해 대외송금 보장
② 외국환거래 정지 조항 배제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함
③ 내국민 대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에 대해 한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 이른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보장
④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보호 조치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적시,

▲ 외국환거래 정지 조항 배제는 외국인투자만을 향한 특혜의 성격이 분명함.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는 이미 '내국민 대우'를 통해 달성 가능한데도 두겹, 세겹의 보호장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 외투기업 현금지원시 국가/지자체 부담 비율

항 목 (단위 : %)	수도권		비수도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30	70	60	4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	50	50	50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30	70	60	40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30	70	60	40
- 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위 항목에서 국가 부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음. -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위 항목에서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지원 제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음

➤ 지자체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현황

지자체	지방세 감면 내용
경기도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23년 5월 조례 개정)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면제 기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인천시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전남, 충남, 대구, 경북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전라북도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광주시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면제액 :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
강원도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승계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시·군별로 재산세 감면 비율/기간 조금씩 다름)
경상남도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 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
부산시	▲ 취득세 : 최대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 재산세 : 최대 10년간 감면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출처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련 뉴스	

➤ 강원도 외투기업 지원제도 현황 (평균 수준)

구분	내용
입지보조금	- 임대료 차액 보조(지원기간 10년 이내), 분양가 차액보조(분양가의 50%이하) - 지원신청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 임대료 차액보조(10년 이내) → 분양(*) : 이미 안하된 임대료(1%)
고용보조금	- 도내 거주자 20명 초과고용 인원에 대하여 → 1인당 100만원/월/6개월 범위내 (3년 고용유지, 신규 고용한 다중연도에 신청)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시 → 1인당 100만원/월/6개월 범위내 * 3년 고용유지, 기업당 10억원 한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연도에 신청
시설보조금	-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하는 설비의 10%(기업당 50억원 한도) * 준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건설당 비용지원	- 외국인이 도내투자 건설당 실시 후 사업시행 확정된 경우, 5억원까지 지원(건설당 비용총액의 50%이하),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
외투지역 지원 (산업단지 지원)	-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 (지원여부와 수준은 개별수요를 고려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해외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

■ 최근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가 변화하는 방향과 트렌드

① 국가안보를 앞세운 규제 강화 ② 낙후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투자 유치

⇒ 요약하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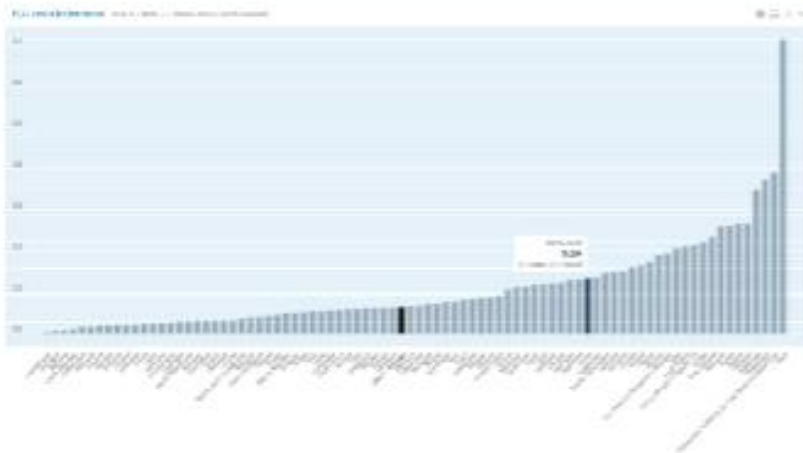
⇒ '문지마 외국인투자 허용' 식으로 무분별한 외자 도입이 이득점으로 인해 콘스타 사태나 쌍용차 기술먹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적 규제 도입 시급

■ OECD 수치화된 척도로 본 외국인투자 규제 수치는 평균 이상, 어째서?

⇒ 노동자들 피부에 와닿는 외투기업 특혜가 법제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

(ex) 2018년 군산공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국민 월세 8,100억을 GM에 지원, 이 지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었음, 당시 정부의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가 1년에 60억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액수의 무려 100배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

➤ 해외 지원제도가 주는 시사점



- 외투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 독소조항과 악법을 없애는 것 등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 법·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 변경 위한 다양한 과제들, 따라서 국회나 법원을 통한 문제라기보다 행정부를 상대로 한 대중운동 조직과 기획의 필요성을 제기

➤ 개선방안 및 대응방향 : ① 올바른 산업정책

■ 산업정책과 전략에 입각한 투자 유치가 이뤄진 적이 있던가

=> 한국 정부 투자유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외투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해 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내 산업의 발전과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전략 없이 묻지마 투자 유치에 매달리는 것

=> 정부는 외투자본 유치로 고용 창출, 신기술 도입, 경쟁력 상승이 있었다 주장하지만, 투자동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 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자본철수, 구조조정, 이윤 유출, 기술 탈취, 조세 회피, 노사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되어 있음.

■ 해외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외자 유치 전략의 방향

- ① 소재·부품·장비의 자국 생산, 전략적 첨단산업 유치, 중소기업 보호, 고용 창출 기준으로 보완
- ② 일방적 철수와 정리해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재, 제도개선, 고용기금 마련 등의 대책 필요
- ③ 조세피난처 경유한 우회투자 및 매매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④ 나아가 한국의 과도한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 개선방안 및 대응방향 : ② 사회 이슈화 및 공론화

■ 외투기업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해야

⇒ 외투기업 문제는 정부 지원정책, 국내산업 발전,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모아내고 사회적 이슈화 및 공론화 통해 해법 찾아야

■ 외국인투자기업 공시의무 강화

- ① 2018년 외감법 개정으로 공시의무 강화했으나 유한책임회사 등 법꾸라지에 대한 대책 포함 개선
- ②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 자본의 로비로 연기되는 분위기 반전

■ 외투기업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해야

- 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 ② 이를 위해 다국적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 역할 정상화 요구

➤ 개선방안 및 대응방향 : ③ 외투기업 본사 및 공급망 공략

■ 외투기업, 특히 제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

⇒ 그들이 납품하는 고객사(원청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며, 납품과 거래관계를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이윤 뽑아먹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 이 관계를 감안하면 특정 외투사업장의 공급망 안에 외투사-본사-국내 고객사라는 3개의 중요한 주체가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됨

⇒ 따라서 외투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횡포에 맞서는 방식은 ①외투사업장의 본사를 직접 공략하는 길, ②국내의 고객사를 비롯한 외투사업장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공략하는 길이 있음.

■ 공급망에 있는 최고 지배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 ① 다국적기업 본사 차원의 이윤 유출, 글로벌 전략 분석해 문제 지적해야
- ② 공급망 속에서 대체생산 등 추진되므로 공급망 파악하고 관련 기업 노조 및 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 개선방안 및 대응방향 : ③ 외투기업 본사 및 공급망 공략

■ 공급망 실사 과정 및 거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수단들



출처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Conduct

■ 총연맹과 산별노조 차원에서 다국적기업 글로벌 전략 및 경영분석, 국제연대 역량 확보 필요

⇒ 특히 자본 철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연대 역량이 취약한 제조업 분야 일본 외투기업 등에 대한 대책 강화되어야

➤ 개선방안 및 대응방향 : ④ 법·제도 개선

법안	개정 취지 및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정리해고 시 해고일시 여부나 노동자에 대한 보상 관련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24조 개정)
상법 개정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 노조 또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해산 등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상법 제382조의 3, 제402조 및 제 517조의2 신설)
채무자회생법 개정	소위 '먹튀자본' 방지하기 위해 회사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조 포함 노동자의 참여권 또는 동의권 제도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채무자회생법 제34조, 39조, 237조 제2항 신설)

▲ 현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통해 위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종합토론 1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분석의 필요성과 후속 연구의 중요성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백남주 연구위원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의 필요성과 후속 연구의 중요성

백남주(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의 필요성과 이번 연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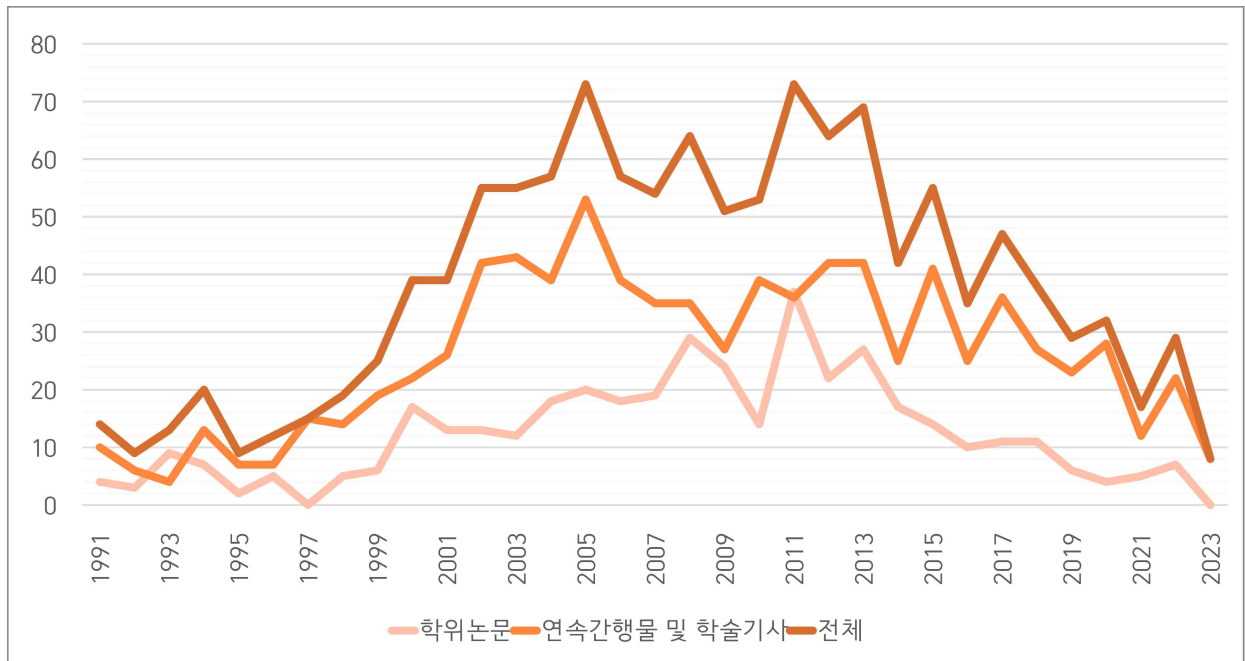
1) 현황분석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1997년 IMF 이후 ‘기업사냥’ 등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속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고착화되면서 그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 하지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의 국제정세상, 경제구조상의 변화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전략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국내 본격적인 외투기업 진출의 계기가 되는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 배경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의 실업문제, 외환보유고문제, 기업부실문제 해결 등이었음.¹⁾ 하지만 현재는 실업문제의 근본원인이 자본 부족이 아니며, 외환보유고 역시 상대적으로 넉넉함. 기업부실문제 역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
-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진출 이유가 과거에는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와 본국 사양산업의 이전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음(산업자원부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투자목적으로 69%가 한국 내수시장 진출이라고 응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국내 시장을 넘어 이후 발전가능성에 따라 한국 주변국 진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음.²⁾ 특히 국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의 관계 악화 및 미국경제권으로의 편입 등은 국내 외투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이용해 풍부하게 외투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을 아우르는 사례를 조사한 이번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됨.

1) 김주희, 2011,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 투자동기에 따른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노동연구』 제22집. p81~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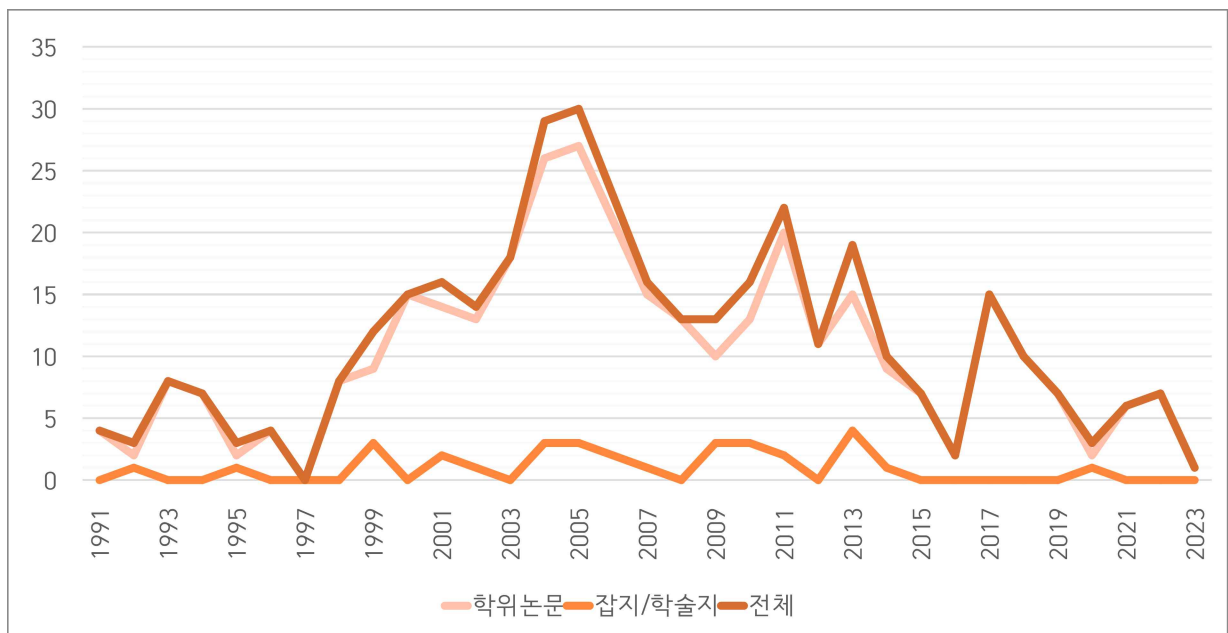
2) 임재웅, 2021,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동향에 관한 연구 : 자동차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KBM Journal』 2021,5(2). p18.

2) 줄어드는 연구성과



〈그림 1〉 국회전자도서관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검색결과 학위논문 및 연속간행물 검색 결과 수

※ 검색일 2023년 11월 2일. 국회전자도서관은 자료를 ▲도서자료, ▲학위논문, ▲연속간행물·학술기사, ▲멀티미디어, ▲동영상, ▲국회자료, ▲특화자료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학위논문과 연속간행물·학술기사 수를 기준으로 살펴봄.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검색결과 학위논문 및 잡지/학술지 검색 결과 수

※ 검색일 2023년 11월 2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자료, ▲학위논문, ▲잡지/학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학위논문과 잡지/학술지 수를 기준으로 살펴봄.

- 외투기업에 대한 전략과 정책방향의 재검토 요구가 커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투기

업과 관련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 그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2011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그림1).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기준으로 유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그림2).³⁾
- 그 내용에 있어서도(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된 학위논문 기준) 중국이나 북한진출 관련 기업에 대한 것, 효율적 입지 환경 등의 경영 효율성, 세금 및 배당정책 등을 주제로 하고 있음.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해 보임.
- 특히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최근 10년 간을 기준으로 필자가 파악해본 결과 외투기업 노사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은 이승협(2015)⁴⁾, 임재웅(2021)⁵⁾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것도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임. 그 외 강수현(2022)⁶⁾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국내 외투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외투기업이 어떤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됨.
- 아래에서는 보고서의 2장(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쟁점), 3장(사례분석에서의 서비스산업 부분), 5장(결론)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고 후속 연구 시 고려했으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점에서 서술해 보겠음.

2. 국내자본의 국내 재투자 정책과 리쇼어링 정책

-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 보호주의 경향 등으로 외투기업의 철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자국 주도 공급망 개편을 위해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내 투자를 압박하는 흐름도 강하게 존재함. 따라서 국내 자본의 국외 투자 문제와 국내 자본의 국내 재투자 문제 등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관련해서 보고서는 투자수지 적자 폭이 심각한 상황임을 수치로 보여주며 “국내 자본의 재투자를 끌어낼 방안을 도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지적하고 있음. 현 국제질서 변화와 맞물려 보고서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됨.
-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자본 유치’를 이야기할 때 의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에 대한 혜택 등이 등장한다는 것.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사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리쇼어링 정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⁷⁾ 등이 그것임.
- 실제 미국, EU,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은 리쇼어링의 범위를 유턴을 포함한 니어쇼어링

3) 물론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키워드로 검색한 단순한 결과이며 키워드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연구의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됨.

4) 이승협, 2015, “국내 진출 외투기업 특성 및 노사관계 영향요인 연구 - 제조업 유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25권 제2호.

5) 임재웅, 2021,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노사관계 동향에 관한 연구 : 자동차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KBM Journal』 2021,5(2).

6) 강수현, 2022, 「기업수출과 생산성의 인과관계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류주한, 2023,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KEFe매거진.

(Near-shoring)과 해외투자 철회 후 국내 투자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수입 원자재 관세 감면 및 세금 공제 혜택, 법인세 인하), 공장 이전 비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⁸⁾

- 위와 같은 내용과 주장들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국내 재투자를 위한 무분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은 극도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지도 의문.

- 따라서 국내 자본이 재투자와 관련해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언이나 정책방향이 제시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 됨. 또한 이는 최근 미중간의 주도권 싸움 등 세계질서와 한국의 외교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점임.

- 한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 FDI 규제강화 흐름과 외투기업철수 문제에 있어 국가적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3. 서비스산업 사례연구

- 서비스연맹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연구가 소속된 노조와 연관이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그동안 사안이 발생함에 따른 사업장 별로 개별 대응을 해왔던 것을 넘어 서비스산업에서의 외투기업 특징을 파악한 데 기초해 노조 차원에서의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보고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 배송, 고객관리 등 공급사슬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외주·하청·자회사 등을 만들어 외투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고 불안정노동을 확대하여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그 일반적 특징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비스연맹 차원의 과제를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조업 부문 사례분석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서비스업 외투사업장의 경우 그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고리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됨.

- 서비스산업 외투기업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외투기업의 횡포가 일반 시민들의 권한 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노사 관계를 넘어 ‘소비자’, ‘고객’이라는 제3주체가 개입하는 특징이 있는바, 외투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 보고서에서 사례분석을 하고 있듯이 쿠팡은 택배 사회적합의를 무시하고 있음. 택배 사회적 합의는 노사간의 합의를 넘어 시민사회(이를 좀 더 확장해 해석해 본다면 시민일반)까지를 아우르는 합의라 할 수 있음. 이를 쿠팡이 무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

4. 후속 보완 연구과제_외투기업 유형을 중심으로

- 이번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후속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시대적 변화 상황에서의 노동환경을 고려한 외투기업의 철수 문제, 외투기업 내의 노사

8) 민혁기·문종철·강지현·안유나, 2021, “리쇼어링 추진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갈등 문제 등에 있어 노동계의 대응전략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이번 연구는 산업별(금속노조 중심의 제조업, 사무금융노조 중심의 금융업, 서비스연맹 중심의 서비스업)로 그 사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같은 외투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구조와 맞물려 산업별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됨. 이렇게 외투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역시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외투기업의 유형별 문제점을 정리(5장)한 것 역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외투기업 혹은 외국자본의 유형은 산업별 뿐만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틀로 외투기업의 유형을 파악해 본다면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역시 더 구체적일 수 있다고 생각됨.

1) 자본의 국적과 본국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

- 소위 본국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는 모기업 국적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통상 미국 자본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할 것이고, 유럽자본의 경우 미국자본에 비해 조금 더 노동친화적일 것이라는 생각들이 존재해 왔음.

- 하밀(Hamill)은 미국 국적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본사의 노사관계의 개입력이 높았으며, 유럽기업의 경우는 개입력이 낮았고, 미국기업이 노사 간의 갈등 정도가 매우 크거나 또는 파업 직후 노사관계가 안정화하는 시기에 본사의 개입력이 높았다고 평가한 바 있음.⁹⁾

- 하지만 국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역시 상당수 존재함.¹⁰⁾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화 정도가 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위 선진국 자본 간 장벽이 낮아지고 조세회피처 등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자본의 국적 문제의 중요도가 적어졌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직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가 혹은 지역별로 건당 신고금액, ‘투자 약속 준수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물론 이러한 표면적 수치를 가지고 자본의 국적에 따른 영향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별로 나타나는 특징의 구조적 원인을 조금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국가별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 예를 들어 최근 서비스연맹 소속 SK쉴더스의 경영권을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사모펀드가 인수했음. 스웨덴의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칠지, 자본 일반의 속성이 더 클지에 대한 파악할 수 있다면 대응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2) 투자유형별 구분과 대응전략

9) Hamill, J. 1984. "Labour Relations Decision-making with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15 2.

10) 이승협, 2015, "국내 진출 외투기업 특성 및 노사관계 영향요인 연구 - 제조업 유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제25권 제2호.

- 외국자본의 투자유형별로 국내 사업장이나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됨.
- 더닝(Dunning)은 외국자본의 투자목적에 대해 ▲자원추구형(Natural resource-seeking),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성추구형(Efficiency-seeking), ▲전략적 혹은 기술적 자산추구형(Strategic asset-seeking) 등의 4가지로 유형화 한 바 있음.¹¹⁾
- 자원추구형의 자본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비용 등에 집착할 유인이 크며, 시장추구형은 납품을 하는 국내기업이나 소비자의 동향을 중시할 것임. 효율성추구형 자본은 본국과의 유사성 등을 중요시 할 것이고, 기술적 자산추구형은 기업매매나 고숙련 노동자의 확보 등에 더 큰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큼. 이런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본의 대응방향도 달라질 것.
- 사업장의 산업별 분류를 한 축으로 하고 투자유형별로 외투기업의 유형을 나눠 본다면 노동의 대응전략 역시 더욱 체계적일 수 있을 것.

3) 자본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구분과 대응전략

- 같은 맥락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진출함에 있어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에서 현지에 적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기준으로 외투기업을 구분해 보는 것도 유효할 수 있음.
- 펄뮤터(Perlmutter)는 외투기업들의 현지화에 대한 태도를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c), ▲다문화중심주의(Polycentric), ▲지역중심주의(Regiocentric) 등으로 구분한 바 있음.¹²⁾
- 자문화중심주의가 강한 기업의 경우 자국내 노사관계의 틀을 진출국에 이식하려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갈등 역시 커질 가능성이 큼.¹³⁾ 반면 다문화중심주의는 해외 자회사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영권을 부여할 여지가 크며, 노사관계 역시 현지의 노사관행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됨. 지역중심주의는 특정지역에 한해서 진출국의 경영 자율성을 일정 보장해 줄 것.
- 본사의 전략 유형에 따라 노사관계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것. 이런 측면에서 현지 경영진의 역할도 일정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물론 대다수 핵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본토의 경영진들이 하겠지만 현지 경영인에게 부여되는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실제 현지 경영인이 권한이 없는 것과 일종의 주인-대리인 문제와 유사하게 실제 권한이 있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해태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이렇게 외투기업의 유형 구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 보고¹⁴⁾, 국내 사업장의 현황을 대비해 본다면 노동의 대응 전략 역시 더욱 구체성을 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11) Dunning, John, 1994, "Re-evaluating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Business Studies, University of Reading. 한편 이러한 유형구분은 외국 자본이 강성노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거나 나가려 한다는 '노조환원론'적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되기도 함.

12) Perlmutter, H.V. 1969.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13) 김주희(2011)는 이러한 사례로 HP의 'HP way', GM의 글로벌생산시스템을 예로 들고 있음(앞선 논문, p75).

14) 다음의 연구는 ▲문화적차이, ▲의사결정의자율성, ▲노사관계전략, ▲투자동기, ▲진출형태, ▲인적자원관리방식을 외투기업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음. 박우성·유규창, 2000,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제10권 제1호.

종합토론 2

외국인투자기업 대응 방안 검토

사무금융노조 임동근 사무처장

사무금융노조 외국인투자기업 대응 방안 검토

임 동 근(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

1. 사무금융노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기준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로 보고 있다.

금번 연구에서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은 15,257개이며, 고용인원은 808,588명으로 평균 고용인원은 53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2023년10월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에 등록된 외투기업은 17,506개로 확인되는데, 이중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는 모두 28개로 확인된다. 우리 노조 외국인투자기업의 2022년 고용현황은 총 20,703명이며 평균 고용인원은 약 739명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평균 고용인원과 비교하면 약14배 가량의 고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도 해당 기업에 경제적으로 연관된 것을 감안하면 총 44,28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우리 노조 내 외투기업은 평균 이상의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를 견인중이다.

회사명	표준산업분류명	임직원수 (설계사수)	외투기업최초 등록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생명보험업	620 (3,580)	1989.11.16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생명보험업	108 (121)	1992.09.05
ABL생명보험	생명보험업	794 (1,921)	1999.07.30
라이나생명보험	생명보험업	770 (582)	2004.06.28
교보생명보험	생명보험업	3,754 (13,608)	2012.09.20

동양생명보험	생명보험업	921 (2,059)	2015.09.18
푸본현대생명보험	생명보험업	457 (363)	2016.01.08
AIA생명보험	생명보험업	611 (1,157)	2017.06.19
AXA손해보험	손해보험업	1,689 (194)	2007.05.23
유안타증권	증권중개업	1,742	2014.06.12
NH-Amudi자산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189	2003.01.29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53	2005.03.07
애크온캐피탈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214	2015.08.27
현대카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1,998	2005.11.03
현대커머셜	금융리스업	508	2021.04.30
제이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208	2015.02.1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462	2012.08.23
한국기업평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187	2001.01.15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	특정 상품 중개업	86	2006.04.25
CMA CGM KOREA	외항 화물 운송업	156	2007.06.11
구글코리아	컴퓨터시스템 자문 및 구축	681	2004.03.22
SAP 코리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469	1995.11.03
한국 오라클(유)	데이터베이스 제공	741	1990.01.04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534	1989.02.09
한국 SAS 소프트웨어(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127	1990.06.14
한국 HP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488	1986.08.25
한국 SGS	기술 시험, 검사 분석업	1,111	1988.05.10
한국 바스프	화학 물질 제조 · 무역업	1,025	1992.05.04

(기준 : 명, 2022년12월말 기준 / DART, 회사별 경영공시, 잡코리아 자료 등 참고)

한편, 2022부터 현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54%가 도·소매 유통업이며, 사모투

자 증가에 따른 페이퍼 컴퍼니 확대로 금융투자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볼 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데 반하여,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우리 노조 산하 외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무금융노조 산하 외국인투자기업 변화

(1) 생명 · 손해보험

Swiss Re에서 2022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7위(손해보험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정도이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2%,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95.1%로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의 성장세는 하락세 상황이다.

생명보험업의 지난 20년간 국내사와 외국사 현황을 비교하면 회사 개수는 차이는 없으나 외국계 사는 국내사에 비해 매각 등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생명보험사]

구분	FY2003	FY2013	FY2022
국내사	대한, 삼성, 교보, 흥국, 럭키, SK, 금호, 동부, 동양, 신한, 하나, 한일 SH&C, 녹십자 (14개)	한화, 삼성, 교보, 흥국, 우리아비바, 미래에셋, KDB, 동부, 동양, 신한, 하나, KB, IBK, NH, 교보라이프플래닛 (15개사)	한화, 삼성, 교보, 흥국, DGB, 미래에셋, KDB, DB, 신한라이프, 하나, KB, IBK, NH, 교보라이프플래닛 (14개사)
외국사	알리안츠, PCA, AIG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뉴욕, ING, 라이나 (8개사)	알리안츠, PCA, ING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에이스, 라이나, AIA BNP파리바카디프 (9개사)	ABL, 동양, 라이나 메트라이프, AIA 처브라이프, 푸본현대, BNP파리바카디프 (8개사)

[외국계생명보험사 변화]

회사명		비고
과거	현재	
알리안츠	ABL	제일생명 → 알리안츠그룹 인수(알리안츠생명) → 중국 안방보험 인수(현 다자보험그룹)
PCA	미래에셋	영풍생명 → 영국 푸르덴셜 인수(PCA) → 미래에셋금융그룹 인수(미래에셋 합병)
AIG	AIA	2008년 금융위기로 AIG금융그룹에서 분리
ING	신한라이프	2008년 금융위기로 구조조정 후 MBK파트너스로 매각 → 신한금융지주 인수(신한라이프로 합병)
동양	동양	중국 안방보험 인수(현 다자보험그룹)
라이나	라이나	처브라이프 인수

푸르덴셜	KB라이프	KB금융그룹 인수
뉴욕	처브	에이스그룹 인수
현대라이프	푸본현대	대만 푸본그룹 최대주주
SH&C	BNP파리바카디프	신한금융지주, BNP파리바카디프 합작사 → 신한금융지주에서 분리

손해보험업도 지난 20년간 국내사와 외국사 현황을 보면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등 장기상품이 다수인 생명보험업과 비교하여 단기운용되는 재물보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영업 철수 회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최근 손해보험업중 재보험사는 회계기준 변경과 국내 유일한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자본증대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한국시장 진출이 확대되었는데, 재보험사는 한국지점으로 설립되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용을 받는 상황으로 금번 연구에서 빠져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지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손해보험사_재보험사 제외]

구분	FY2004	FY2013	FY2022
국내사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신동아, 제일, 쌍용, 대한, 그린, 교보, 다음, 교원나라 (13개)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롯데, 한화, 흥국, NH, MG, 더케이, 현대하이카 (15개사)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NH, MG, 하나, 캐롯, 신한EZ, 카카오페이 (14개사)
외국계	AIG, ACE, 페더럴인슈어런스,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 스미토모, Royal, 알리안츠 (7개사)	AXA, AIG, 에이스, 에르고다움,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 스미토모, 젠워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퍼레이션, DAS Legal Expense (9개사)	AXA, AIG, 에이스 미스이스미토모, 퍼스트어메리칸권원, 알리안츠글로벌코퍼레이트 앤스페셜티에스이, 동경해상일동화재, 팩토리뮤추얼인슈어런스 (8개사)

[외국계손해보험사 변화]

회사명		비고
과거	현재	
알리안츠		2003년 국내영업 철수
Royal		2006년 국내영업 철수(로얄 앤 선 얼라이언스)
에르고다움	신한EZ	2003년 다음다이렉트 설립 → 2008년 에르고에 매각 → 2012년 AXA에 매각 → 2014년 BNP파리바 매각 → 신한금융지주에 매각
젠워스		2018년 국내영업 철수
DAS법률		2021년 국내영업 철수

(2)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저축은행

해당업의 일본계 기업의 경우 고배당 정책 또는 매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 계열사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했던 J트러스트그룹은 2012년 JT친애저축은행(구 미래저축은행)과 2014년 JT저축은행(구 SC저축은행)과 A캐피탈(구 SC캐피탈, JT캐피탈)을 인수하였으나, 인수 후 한 차례도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0년 J트러스트그룹은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현 A캐피탈) 매각을 추진하였고, VI금융투자(현 SI증권)가 우선협상대상자였으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VI금융투자 대주주가 홍콩계 사모펀드인 뱅커스트리트프라이빗에쿼티(PE)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뱅커스트리트PE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없는 JT캐피탈(현 A캐피탈)을 우선 인수하고 JT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뱅크스트리트PE는 국내 사모펀드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공동으로 SPC(키스톤뱅크1호유한회사)를 설립하여 JT캐피탈을 인수하였다. 이후 JT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JT캐피탈은 A캐피탈로 사명이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나, 특수관계인에게 법정 여신한도를 초과해 신용 공여한 사실, 유동성을 고려없이 투자한 사실, 고배당 정책과 회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2023년 총 인원의 절반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계 저축은행, 할부업 변화]

회사명		비고
과거	현재	
KT캐피탈	에큐온캐피탈	2015년 사모펀드 JC플라워 인수 2019년 사모펀드 베어링PEA 인수 2022년 베어링PEA → EQT파트너스 인수
	도요타파이낸스코리아	2009년~2018년 배당성향 100%. 자본금 회수
SC저축은행	JT저축은행	2008년 스탠다드차티드(SC)그룹 인수 2014년 일본 J트러스트그룹 인수 2020년 VI금융투자(최대주주 뱅커스트리트PE)로 매각 추진 시도(실패)
미래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2012년 일본 J트러스트그룹 인수 2020년 계열분리로 넥서스뱅크에 매각 2022년 J트러스트가 넥서스뱅크 인수

(3) 정보통신업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분리되었고, 감사가 필수로 되어 있다. 주식을 발행하고 외부 자금을 끌어 오는 만큼 외부감사와 투명한 경영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에서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에서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감사보고서 공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자 회사 등기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회사로 제안된 것인데, 외국 기업이 이용하는 이유는 사원(회사에 지분을 가진 투자자)이 한명이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은 한국법인 설립시 본사가 100% 자본금을 내고 있으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은 “전원 동의”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면제되고, 조세혜택과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 사원의 유한책임을 누리고, 해당국 정부의 견제나 외부감사, 투명한 경영 등의 항목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로열티, 배당금, 세금 납부액 등 민감한 정보 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악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문제점 및 시사점, 대응방안

(1) 위기의 보험업

외국계 보험사의 한국진출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재무설계라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종신보험을 판매하였고, 대줄 남성설계사 조직을 만들어 영업을 전문직화하였고, TM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고령화시대에 고령 상품과 치아보험 등 새로운 상품과 판매전략 등으로 국내 보험시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양질의 고용을 만들었던 외투기업이 최근 매각 진행 중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한국시장을 철수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으로 보험업 영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한화)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37%인데 반하여, 8개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15%이다. 손해보험은 더 심각하다. 2020년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는 반면, 5개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여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의 철수는 결국 고용의 위기를 의미한다. 회사의 영업 철수 또는 매각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막아내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규제를 완화하여 외투기업이 시장에 더욱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정에서 노사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 의료 데이터를 통한 보험업계 혁신 성장 지원

보험상품 개발시 해외 자료를 이용한다면, 국내 실정의 건강 보장 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의료데이터를 심사평가원이 약 3조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데이터는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보험업계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도 해결하여 금융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보험 비즈니스 확대가 필요하다.

○ 금융·웰빙 통합서비스 지원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시너지를 통한 금융사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장기요양사업 등)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데이터기반 경쟁력 강화, 예방중심의 보험관리 체계 구축 등 신사업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적 요소가 필요하다.

(2) 외투기업 노사정 정책 협의 채널 마련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확대와 규제완화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외투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우리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위원회 등과 정례적으로 진행되던 대화 채널이 막혔다. 현재 상태로는 대화 채널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과거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하다. 1980년대 싱가포르 경제를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재편할 당시 이뤄진 기술향상 훈련과 재훈련 정책들을 위해 마련된 기술개발기금(SDF)는 노사정 3자가 협의하여 운영하였다. 싱가포르는 독립이후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국가는 노동조합을 국가임금위원회(The National Wages Council. NWC)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일부로 편입시키는 등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우리 정부도 충분히 고민하길 바란다.

물론, 당시 싱가포르의 독특한 국가조합주의에 근거한 노사정 협력으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또한 노동과 경영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서 문

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며, 한국경제 연구원이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주한외국기업 중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23.4% 정도이며, 노사간 대화 창구 강화를 사측의 29%가 원하고 있는 등 충분한 대화채널 요구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므로 외투기업 노사정 정책협의 채널 또는 산업별 외투기업 사용자단체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대응

갈수록 고용이 불안하고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제도 개선에 있어서 문제점은 통상협정이나 국제규범에 따른 내국민 대우 원칙이었다. 국내기업 말고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통상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투기업 먹튀를 제한하려면 노동권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이다. 외투기업 폐업시 강화된 고용보호 의무를 국내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면 통상협정 등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연구에서도 언급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지만, 표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본권 보장이 외투기업의 먹튀 또는 영업 철수 등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므로 해외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관계는 원·하청 노동자 문제로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따라 하청노동자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가지 덧붙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노동 유연화나 먹튀가 예상됨에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

(4) 국제노동단체 연대와 활발한 교류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와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에 맞서기 위한 노동계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총연맹과 다른 산별에서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조합연대회의(UNI) 등과 연대하고 있는데, 정기적 회의 참석 또는 간담회 활동에서 벗어나 국제노동조합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번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외투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노조와 충분히 교류하고 국내 외투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투자국가의 모회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대활동을 통해 투자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런 결정도 책임도 질 수 없는 외투기업의 국내 투쟁에서 벗어 났으면 좋겠다.

종합토론 3

한국와이퍼 사례를 통해 본 노동대응에 대한 첨언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한국와이퍼 사례를 통해 본 노동대응에 대한 점언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

외투자본 투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한국와이퍼분회는 투쟁을 시작하기 전 한국와이퍼 청산철회투쟁을 이렇게 명명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랬다. 애초부터 승리(청산철회 및 고용쟁취)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투쟁이었다. 이미 체급차이가 나도 한참이나 나는 투쟁이었다. 금속노조에서 오랫동안 간부생활을 하셨던 나이지긋한 한 선배활동가는 구조조정 투쟁을 가슴아프고 치절한 싸움이라고 했다.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덴소그룹은 2021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산업전환기 ‘신사업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중 자본비용 이하인 사업은 외부화, 자본비용 초과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흐름에 따라 자본은 착실하게 기존 사업부를 축소해왔다. 특히 한국 사업의 경우 와이퍼사업부 뿐만 아니라 과감한 사업축소 및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노사관계법이란 당연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운영(청산)에 대해 법이 규제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분회를 설립하던 2018년 그해 우리는 회사의 존립이 걱정되었다. 우리 삶의 기반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현장의 대다수는 그래도 3백 규모의 나름 중소기업인데 그렇게 쉽게 청산될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사실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주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사가 없어지기보다는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그 후로 정확히 만 4년도 채 안되어 회사는 청산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생산지로 하는 글로벌 자본의 특성상 좀더 이윤을 내기 쉬운 방식으로 생산을 유연화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의 이윤이 있건 없건 좀 이윤율이 높은 생산지로 옮겨타는 것은 글로벌 자본의 특징이다. 그래서 외투자본 영역에서는 좀더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국가로 생산지를 이동하면서 흑자폐업조차 발생한다. 더해서 이동과정에서 혹은 이동후 자본철수까지 철저히 본사로의 이윤이전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지를 피폐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

이나 청산해고는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된다.

한국와이퍼 청산철회 투쟁은 어쩌면 최악의 조건이었다. 한국와이퍼는 텐스코리아 와이퍼사업부의 2차 하청에 불과했고 와이퍼 생산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했다. 텐스코리아 와이퍼사업부 매각절차를 밟자 이를 저지하는 방법외에는 한국와이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한국와이퍼분회가 준비한 ‘돌 다섯 개와 물매’

폴리앳과의 싸움을 벌이기 위해 다윗은 투구와 갑옷대신 돌 다섯 개와 물매를 준비했다. 한국와이퍼분회도 애초에 이 투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한국와이퍼분회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은 노조법에 기반한 법률적 태세를 갖추는 것과 단결이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해고를 사회적으로 알려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텐스코리아와 텐소와이퍼가 연대서명한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는 투쟁 준비물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텐소가 준비한 ‘대체생산으로 인한 파업 무력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나마도 이 고용안정협약서 덕에 ‘단협위반 해고금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힘을 얻었다.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단결이었다. 209명의 단결 유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았다. 단결 그 자체가 큰 무기임은 우리 ‘다윗’ 들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단결을 유지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해고를 알려 글로벌 텐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본사 직접교섭 쟁취와 투쟁 전술의 주도성

우리는 처음부터 이 투쟁의 대상을 텐소로 여기고 텐소를 직접 교섭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투쟁을 2020년부터 벌여왔다. 투쟁의 대상이 명확하다보니 한국관리자들과의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텐스코리아와 일본원정 투쟁 등 텐소에 대한 투쟁을 처음부터 집중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현장내 불합리성에 대해 집중하는 편이라 한국관리자들과의 갈등이 많았다. 이를 조율하는 것은 분회임원들의 결단과 고집이었다.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애플 경영(한국와이퍼의 경우 2015년부터 한국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다)의 특성상 한국관리자의 비리와 횡포(?)가 많았다. 문제제기하자면 언제든 한국관리자의 교

체가 가능함에도 이를 주장하기보다 본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러한 투쟁 전술은 시간은 걸렸으나 결국은 텐소와이퍼의 대표이사를 직접 한국의 교섭자리로 불러앉히는 결과를 낳았다. 외투자본이 직접 교섭에 참가하는 순간 이를 책임지는 형태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내 노사갈등이 중심이 되기 보다 좀더 본질적인 문제인 청산 철회, 고용보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국와이퍼 투쟁의 특징을 굳이 뽑는다면 투쟁전술의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본의 횡포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자본을 흔들고 자본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에 있는 것 같다.

텐소자본은 끝까지 고용기금에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싫어했다. 다만 ‘고용기금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도로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와이퍼 투쟁에 대해 텐소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한국와이퍼분회가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와이퍼 투쟁을 통해 외투자본이 청산 혹은 노조탄압,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의 노조법 강화가 핵심

한국와이퍼 투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파업의 무력화였다. 한마디로 노동자가 싸울 수 있는 결정적 힘이 없었다. 노동자가 대응하게 교섭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텐소는 외투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간단히 무력화했다. 본사인 텐소와이퍼는 한국와이퍼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한 모든 설계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텐스코리아에게 제공함으로써 텐스코리아가 대체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텐소와이퍼는 설계도 뿐만 아니라 부품을 생산해서 대체생산 납품을 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불법대체생산 진정을 넣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본사인 텐소와이퍼는 외국이라 조사가 어렵고 텐스코리아는 지분관계가 없어서 사용자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 노동관련법률에서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의 관계에서 사용자를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에 따르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음으로 텐스코리아의 불법대체생산에 대해 충분히 법률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텐스코리아는 한국와이퍼 노사관계에 대해 일일이 보고 받았으며 심지어 단협의 한 구절까지 보고받고 개입했다는 증거또한 확보하고 있음에도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협과 노동자의 권리가 간단히 무력화되었다. 이 뿐 아니라 조기퇴직제도의 ‘부당노동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해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장관이 직접 발언한 바 있다) 3차례의 조기퇴직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한번을 위반하던 세 번

을 위반하던 그 처벌은 같다.”며 노조법 위반 처벌조항의 무력함을 반증했다.

고용보장 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고용을 지킬 수 없었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사회 각 계각층의 공감과 문제인식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외투자본의 노동법과 노동자 유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한국 노조법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한국사회 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외투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종합토론 4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박경구 사무관

